

3년 비공개



의안번호	제 343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12. 9. (제3차 임시회의)

의  
결  
사  
항

(주)엠젠플러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손 병 두
제출 연월일	2019. 12. 9.

## 1. 의결주문

(주)엠젠펙플러스의 제39기(2011.1.1.~2011.12.31.)부터 제45기(2017.1.1.~2017.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엠젠펙플러스의 제39기(2011.1.1.~2011.12.31.)부터 제45기(2017.1.1.~2017.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주)엠젠펙플러스에 대한 조치안(고의Ⅲ)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13년 988백만원, ‘14년 705백만원]</li><li>○ 허위 매출계상 및 매출원가 계상 누락 등 [대여금 허위계상 ‘14년 연결·별도 345백만원, 매출원가 누락 연결 ‘14년 340백만원, ‘15년 190백만원, 별도 ‘14년 739백만원, ‘15년 356백만원, 허위 매출 계상 연결 ‘14년 355백만원, ‘15년 456백원 등]</li><li>○ 장기체화재고 관련 매출 허위계상 등 [‘14년 및 ‘15년 271백만원]</li><li>○ 사급자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14년 1,228백만원, ‘15년 1,188백만원, ‘16년 1,076백만원]</li><li>○ 유형자산 취득계약 주식 미기재 [‘15년 7,740백만원]</li><li>○ 종속회사 등과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 계상 [‘17년 별도 매출 2,715백만원, 매출원가 2,510백만원, 연결 매출 735백만원, 710백만원]</li><li>○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식 미기재 [연결 ‘11년 56,575백만원, ‘12년 48,256백만원, ‘13년 75,096백만원, ‘14년 60,717백만원, ‘15년 52,663백만원, ‘16년 46,446백만원]</li><li>○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 위반 [‘15.7.24. 999백만원 유상증자 관련]</li><li>○ 외부감사 방해 [‘14년]</li></ul>
-------	---

<b>조치 내용</b> *1,*2,*3,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 220.2백만원</li> <li>○ 과태료 50백만원</li> <li>○ 감사인지정 2년</li> <li>○ 검찰통보(회사, 前 대표이사 000)</li> <li>○ 시정요구</li> <li>○ 개선권고</li> </ul>
--	---

※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제42기의 경우 담당임원 해임권고에 해당하나 당시 별도의 재무담당임원이 없었고, 前 대표이사 000이 재무제표의 최종 승인권자이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였고, 000이 '15.10.1. 퇴임하였으므로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보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보다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 판단(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 판단)

가.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 “위법행위가 비자금 조성, 임직원등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 보아 “고의”로 판단[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1.가.2)]

나. 허위 매출계상 및 매출원가 계상 누락 등

- (‘14년)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및 “위법행위가 비자금 조성, 임직원등의 횡령·배임, 기타 불법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로 보아 “고의”로 판단[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1.가.1) 및 2)]
- (‘15년)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2.가.2)]

다. 장기체화재고 관련 매출 허위계상 등

- (‘14년) “회계장부, 전표 또는 중요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및 “기타 관련 법규의 위반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로 보아 “고의”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1.가.1) 및 7)]

- (‘15년)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舊 감리결과조치양정 기준 III.2.가.2)]

#### 라. 사급자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조립업체에 원재료 전달의 매출 계상 관련)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2)]
- (완제품 납품시 사급자재 매출 계상 관련) “회계처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원칙(재무회계 개념체계 등)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경우”로 보아 “과실”로 판단[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가.1)]

#### 마. 유형자산 취득계약 주석 미기재

-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임직원 포함)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가.3)]

#### 바. 종속회사 등과 관련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2)]

#### 사.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 “기타 착오, 단순오류 등 회사(임직원 포함)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3.가.3)]

###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가중 및 감경 적용)

- 연도별 기본조치 : [제39기(‘11년)~제40기(‘12년)] 과실Ⅲ, [제41기(‘13년)] 과실Ⅱ, [제42기(‘14년)] 고의Ⅲ, [제43기(‘15년)] 중과실Ⅲ, [제44기(‘16년)] 과실Ⅱ, [제45기(‘17년)] 중과실Ⅳ
- 기본조치의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기본조치의 감경
  - (수정공시 감경) 제39기(‘11년), 제40기(‘12년), 제44기(‘16년) 감경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가.2)]

- 회사는 정밀감리 착수 이후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18.3.9.)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39기('11년)~제44기('16년) 재무제표를 재작성(지적사항 라, 마. 사 관련)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일부 수정·공시한 사실을 고려
- 제41기('13년)~제43기('15년)는 일부 위반행위만 수정·공시되어 보간법 적용하여 감경효과를 고려하였으나 감경효과가 없음

\*4 시정요구 : 회사가 일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하지 않아 시정요구

\*5 개선권고 : 회사에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①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에 대한 지원조직을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② 재무담당임원 등 회계부서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개선권고

#### 나. OO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4년 705백만원]</li> <li>○ 종속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4년 연결 355백만원]</li> <li>○ 장기체화재고 허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4년 271백만원]</li> <li>○ 사급자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4년 1,228백만원]</li> <li>○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정보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 '11년 56,575백만원, '12년 48,256백만원, '13년 75,096백만원, '14년 60,717백만원]</li> </ul>
조치 내용 *1,*2,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OO회계법인(과실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 고</li> <li>※ 지정제외점수 10점</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OOO(과실 III→IV)['11~13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의</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OOO(과실 III)['14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 고</li> <li>○ 직무연수 2시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OOO(과실 III→V)['11~14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의</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OOO(III→IV)['14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의</li> </ul> </li> </ul>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낮아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나. 종속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다. 장기체화재고 허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라. 사급자재의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마.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정보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기본조치의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기본조치의 감경

- 수정공시 감경 : (수정공시 감경) 제39기('11년), 제40기('12년), 제41기('13년) 각각 1단계 감경(제42기('14년)는 보간법 적용 후 일부 회계사만 감경 적용)
  - 감사보고서를 정정함으로써, 회사가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18.3.9.)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일부 위반 내용(지적사항 마. 관련)을 수정공시하도록 적극 조력한 사실이 확인[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나.5)]

\*4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보다 1단계 감경 조치 [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2]

다. OO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속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4년 연결 456백만원]</li> <li>○ 허위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15년 271백만원]</li> <li>○ 사급자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5년 1,188백만원, ‘16년 1,076백만원]</li> <li>○ 유형자산 취득계약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5년 7,740백만원]</li> <li>○ 종속회사 등과 관련한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7년 별도 2,510백만원, 연결 710백만원]</li> <li>○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정보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 ‘15년 52,663백만원, ‘16년 46,446백만원]</li> </ul>
조치 내용 *1,*2,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OO회계법인(과실 II→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제외점수 10점</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OOO(과실 II)[‘15~‘16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6시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OOO(과실 IV)[‘17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의</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OOO(과실 IV→V)[‘15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의</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OOO(과실 IV→V)[‘17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의</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OOO(V→감경시 최소)[‘15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치 없음</li> </ul> </li> </ul>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낮아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가. 종속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나. 허위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다. 사급자재의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라. 유형자산 취득계약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마. 종속회사 등과 관련한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바.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정보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실”로 판단 [新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기본조치의 가중 : 공인회계사 000(‘15년~’16년 주책임자) 1단계 가중

-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은 날(‘15.12.9. 증선위, 조치내용: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단계 가중 [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나.1)]

○ 기본조치의 감경 : (수정공시 감경) 제43기(‘15년), 제44기(‘16년) 각각 1단계 감경(회계법인 및 000 회계사만 감경 적용)

- 감사보고서를 정정함으로써, 회사가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18.3.9.)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일부 위반



내용(지적사항 바. 관련)을 수정공시하도록 적극 조력한 사실이 확인[新심사·감리 결과 조치양정기준 VI.3.나.5)]

\*4 보조책임자는 주책임자보다 1단계 감경 조치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2]

#### 4. 참고사항

가. 제8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19. 6. 20.)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붙임1)

(별지1)

## (주)엠젠플러스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엠젠플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엠젠플러스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0 000 000 00 (0000, 00000000)

☐ 000 [(주)엠젠플러스의 前 대표이사]

- 생년월일 : 0000. 0. 00.
- 주 소 : 000000 000 000000 000(000, 000000000) 0000 0000

###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주)엠젠플러스에 과징금 220,200,000원을 부과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주)엠젠플러스에 과태료 50,000,000원을 부과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주)엠젠펙플러스는 2020회계연도(2020.1.1.~2020.12.31.)부터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주)엠젠펙플러스는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엠젠펙플러스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①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에 대한 지원조직을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② 재무담당임원 등 회계부서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개선권고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제21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주)엠젠펙플러스, 前 대표이사 000을 검찰에 통보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주)엠젠펙플러스(이하 ‘회사’)는 제39기(2011.1.1.~2011.12.31.)부터 제45기(2017.1.1.~2017.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 회사는 제41기(‘13.1.1.~‘13.12.31.) 및 제42기(‘14.1.1.~‘14.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회사 보유 자기주식을 ‘13년 및 ‘14년에 각각 130만주(담보 제공 당시 시가 988백만원) 및 76.2만주(담보 제공 당시 시가 705백만원)를 제공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허위 매출 계상 및 매출원가 계상 누락 등

- 회사는 제42기('14.1.1.~'14.12.31.) 및 제43기('15.1.1.~'1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45백만원을 횡령하여 본인의 차명대출금 상황에 사용하였으나, 동 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 종속회사인 OOOOOO과 관계회사인 OOOOOO가 회사에 제공한 커머스사업 인적용역 대가(매출원가)를 비용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였으며,
- 종속회사 OOOOOO은 OOOOOO에게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며 연결 재무제표에 매출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있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원)

구분	'14회계연도		'15회계연도	
	연결	별도	연결	별도
허위매출 계상	355	-	456	-
매출원가 계상 누락	340	739	190	356
거래처 대여금(횡령자금) 허위계상	345	345	-	-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sup>주)</sup>	340	666	1,020	831

주) 운영자금을 대여한 후 용역비용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이후 대손충당금을 계상(영업외비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거나, 허위 매출채권 및 허위 대여금으로 계상한 횡령자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계상

○ 장기체화재고 관련 매출 허위계상 등

- 회사는 제42기('14.1.1.~'14.12.31.) 및 제43기('15.1.1.~'1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 제조된 후 2년간 판매되지 않고 방치되던 장기체화재고 중 일부를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매출로 계상하고 1년 후 대손상각하는 방법으로 매출(제42기) 및 대손상각비(제43기)를 271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사급자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제42기('14.1.1.~'14.12.31.)부터 제44기('16.1.1.~'16.12.31.)까지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 완제품 발주업체가 구매하여 공급한 원재료 가액을 완제품 조립업체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 전달과정에서 매출로 계상하고, 동 원재료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이전받지 않았음에도 동 원재료 가액을 완제품 발주업체에 대한 매출액에도 포함하여 계상함으로써,
- 매출 및 매출원가를 '14회계연도 1,228백만원, '15회계연도 1,188백만원 및 '16회계연도 1,076백만원을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유형자산 취득계약 주석 미기재

- 회사는 제43기('15.1.1.~'1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 '15.12.29. OOOO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8,600백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계약금을 제외한 취득가액 7,740백만원에 대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종속회사 등과 관련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제45기('17.1.1.~'17.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 최대주주가 개발하였으나 하자 등으로 수리가 반복되었고 신모델 출시로 국내 경쟁력을 상실한 건강관리장비(EMS)가 중국 소재 종속회사(지분율 100%)에 수출 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종속회사에 금융지원 등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매입 및 매출로 계상하였고,
- 실질적으로는 무선통신용품 제조업체(제3자)의 제품 매입자금을 대여하는 거래에서도 관련 제품을 직접 매입한 후 동사에 매출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 연결재무제표에 매출 735백만원 및 매출원가 710백만원 과대계상, 별도재무제표에 매출 2,715백만원 및 매출원가 2,510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제39기('11.1.1.~'11.12.31.)부터 제44기('16.1.1.~'16.12.31.)까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 아래와 같이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매출한 거래처가 존재하였음에도, 관련 사실과 해당 거래처별 매출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였음

## 주요고객 정보 주식 미기재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결재무제표 거래처별 매출			
	A	B	C	계
'11년	42,234	14,341	-	56,575
'12년	30,956	-	17,299	48,256
'13년	-	-	75,096	75,096
'14년	-	-	60,717	60,717
'15년	-	-	52,663	52,663
'16년	-	-	46,446	46,446

### ○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 위반

- 회사는 '15.7.24. 소액공모(999백만원) 공시서류에 전술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14년도 재무제표를 사용함

###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내용

공시일자	유상증자금액	구분	위반 내용	동기
'15.7.24.	999백만원	제42기('14년) 재무제표	허위 매출 계상 및 매출원가 계상 누락 등	고의

### ○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제42기('14.1.1.~'14.12.31.)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매출원가 누락 및 매출 허위계상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거짓의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음

##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16호(유형자산), 제1018호(수익),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제1108호(영업부문)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에게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공시하여야 함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며,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효익의 총유입 만을 포함함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함
  - 특정 항목이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야 함
  -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을 공시하여야 함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 및 그렇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보통임
  -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및 제21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제56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제39조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 회사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4조, 제426조, 제429조 및 제4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및 제387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별표 제2호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44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 및 제48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거짓의 사실이 기재·표시되어 있지 않은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 실적 등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



(별지2)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0 000 00000000 00 (000, 0000)

#### ☐ 공인회계사 000[‘11~‘13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 0000. 0. 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000 000 000000000000 00(000, 00 00 0000) 00000 0000

#### ☐ 공인회계사 000[‘14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 0000. 0. 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000 000 000 000(000, 000000) 00 000000

#### ☐ 공인회계사 000[‘11~‘14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0000. 0. 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000 000 000 000(00, 000000000000) 0000 000000

□ 공인회계사 000[14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0000. 0. 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 000 0000 000(00, 0000 00000000) 00000 0000

## 2. 조치내용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별표1]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부칙(제2019-1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00회계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감사인지정 제외점수 10점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별표2]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부칙(제2019-1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해 “경고” 조치하며,
  - 상기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000, 000, 000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00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주)엠젠플러스(이하 ‘회사’)의 제39기(‘11.1.1.~‘11.12.31.)부터 제42기(‘14.1.1.~‘14.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42기('14.1.1.~'14.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기주식을 임의 출고(76만주, 출고 당시 시가 705백만원)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 회사 증권계좌의 회계연도 중 입출고내역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종속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42기('14.1.1.~'14.12.3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종속회사 OOOOO이 매출을 허위계상하여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을 355백만원 과대계상하였음에도,
- 회사 및 종속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 참여회사 간의 역할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장기체화재고 허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42기('14.1.1.~'14.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회사가 장기체화재고를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고도 271백만원을 매출로 허위계상하였음에도,
- 신규거래처인 거래처 정보 확인 및 면담, 실제 운송자료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사급자재의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42기('14.1.1.~'14.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회사가 유상사급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상사급인 자재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을 1,228백만원 과대계상하였음에도,
- 매출거래처와 체결한 기본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정보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39기('11.1.1.~'11.12.31.)부터 제42기('14.1.1.~'14.12.31.)까지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회사가 회사 총매출액의 10% 이상을 매출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영업부문 관련 주석기재의 완전성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주요고객 정보 주석 미기재**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결재무제표 거래처별 매출			
	A	B	C	계
'11년	42,234	14,341	-	56,575
'12년	30,956	-	17,299	48,256
'13년	-	-	75,096	75,096
'14년	-	-	60,717	60,717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200, 240, 330, 500, 700 등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오류의 발견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 감사절차가 부정의 발견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 후속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 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실증절차 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함
-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2, 3 등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부칙(제2019-13호) 제2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2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직무연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별지3)

##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0 0000 00000000 00(0000, 0000) 0000

#### ☐ 공인회계사 000[‘15~‘16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0000. 0. 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0000
- 주소 : 000000 000 000 000(000, 00 000000000000) 0000 000000

#### ☐ 공인회계사 000[‘17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0000. 0. 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0000
- 주소 : 000 0000 000 00(000, 0000000) 0000 000000

#### ☐ 공인회계사 000[‘15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0000. 0. 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000000
- 주소 : 000000 000 0000 000 00(000, 00000000) 0000 0000

□ 공인회계사 000[‘17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0000. 0. 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000000
- 주소 : 000000 000 000 000(000, 00000000) 0000 0000

□ 공인회계사 000[‘15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0000. 0. 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0000
- 주소 : 000000 000 000 00(000, 000000000000) 0000 000000

##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별표1]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부칙(제2019-1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00회계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감사인지정 제외점수 10점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별표2]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부칙(제2019-1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은 (주)엠젠플러스의 2020회계연도(‘20.1.1.~‘20.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000, 000, 000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아니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주)엠젠펙플러스(이하 '회사')의 제43기('15.1.1.~'15.12.31.)부터 제45기('17.1.1.~'17.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 종속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43기('15.1.1.~'15.12.3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종속회사 ○○○○○○ 매출을 허위계상하여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을 456백만원 과대계상하였음에도,
    - 종속회사의 주요 매출거래처 중 일부의 계약서 검토를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허위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43기('15.1.1.~'1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회사가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허위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상각비(271백만원)를 계상하였음에도,
    - 거래처 정보 확인, 채권조회서 발송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사급자재의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43기('15.1.1.~'15.12.31.) 및 제44기('16.1.1.~'16.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회사가 유상사급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상사급인 자재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을 '15년 및 '16년에 각각 1,188백만원 및 1,076백만원 과대계상하였음에도,



- 매출거래처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유형자산 취득계약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43기('15.1.1.~'1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회사가 유형자산 취득 관련 내용(7,740백만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회사의 유형자산 관련 주석 기재 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종속회사 등과 관련한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45기('17.1.1.~'17.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최대주주가 제조하였으나 최종소비자에게 장기간 판매실적이 없던 진부화된 건강관리장비가 종속회사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 매입대금의 일시 지급 명목으로 개입하거나,
  - 무선통신용품 제조업체의 제품 매입자금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면서, 관련 제품을 직접 매입한 후 동사에 매출하는 형태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 매출 및 매출원가를 별도재무제표에 2,510백만원, 연결재무제표에 710백만원 과대계상하였음에도,
  - 회계관계자, 거래처 면담 등을 통한 실질적인 거래구조 파악을 위한 추가검토 및 타업체와 체결한 물품 매매계약서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정보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제43기('15.1.1.~'15.12.31.) 및 제44기('16.1.1.~'16.12.3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 회사가 회사 총매출액의 10% 이상을 매출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15년 52,663백만원), '16년 46,446백만원)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영업부문 관련 주석기재의 완전성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200, 240, 330, 500, 510, 700 등
  - 상기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오류의 발견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 감사절차가 부정의 발견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 후속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 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실증절차 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함
  -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함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2, 3 등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부칙(제2019-13호) 제2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2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직무연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붙임1)

## 관 계 법 규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 제>

③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삭 제>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4. <생 략>

②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 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5. <생 략>

**제20조(벌칙)** ①「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③「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 략>

4.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5.~7. <생 략>

④ <생 략>

⑤ <삭 제>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략>

####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 (제29조제3항 관련)

1.~6. <생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20. <생략>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 <생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5. <생략>

③~⑦ <생략>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② <생 략>

③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조사)** ①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생 략>

②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나.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감사반의 등록취소

2. <삭 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인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③ <삭 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 략>



**제56조(고발등)** ①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삭 제>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⑥ <삭 제>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나. 주권상장법인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 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는 경우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4. <생 략>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사 및 임직원

-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

을 현저히 결한 경우

-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 3. 조치등의 가중·감경

가. 가중사유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예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예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 처리)**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 처리)**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①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 ④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의2. <생략>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생략>

③~⑦ <생략>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⑧ <생략>

####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② <생략>

③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 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략>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 <생 략>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다. <생 략>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사. <생 략>

14.~29. <생 략>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7.4.18. 개정 전 규정, 위법행위 발생시점 기준>

1.~35. <생 략>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49. <생 략>

②~④ <생 략>

⑤~⑥ <삭 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법 제1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 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해당 서류(집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할 것. 이 경우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나. <생략>

3.~5. <생략>

②~⑤ <생략>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② <생략>

③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생략>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9. <생략>

④~⑥ <생략>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②~④ <생략>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 2.~5. <생략>
- ②~③ <생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4조(고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생략>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④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 1.~3. <생략>
- \*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 1.~4. <생략>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가.~다. <생략>
-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 6.~7. <생 략>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2.~3. <생 략>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4.** 재무상태의 측정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이러한 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 (2) 부채는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4.6.** 특정 항목이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4.13.** 기업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나 생산을 통하여 자산을 획득하지만 다른 거래나 사건도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이나 매장된 광물의 발견 등이 포함된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 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채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4.17.** 기업이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을 희생하게 된다. 현재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는 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현금 지급
- (2) 다른 자산의 이전
- (3) 용역의 제공
- (4) 다른 의무로 대체
- (5) 부채의 자본 전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포기나 권리상실 등 다른 방법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한다.

**4.27.**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 및 그렇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하 생략)

**4.29.** 광의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된다. 수익은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임대료수익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된다.

**4.44.**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4.49.**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비용의 인식이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급여의 발생에 따라 부채의 증가가 인식되며 설비의 감가상각에 따라 자산의 감소가 인식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74.** 재무제표에 다음의 사항도 공시한다.



- (2)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
- (3)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8.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효익의 총유입만을 포함한다. 판매세, 특정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어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제적효익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익에서 제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대신에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9.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5.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소매판매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16.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1)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 (2)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 (3)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 (4)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18.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판매 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판매시 판매대금의 송금에 대한 외국 정부의 허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송금이 허가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 적용사례21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

문단 8에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인 기업이 받는 금액은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에 해당하지만 대리인인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대신에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기업은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시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은 고객에 대한 재화나 용역 제공이나 주문의 이행에 대하여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하거나 구매한 재화나 용역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 (2) 고객이 주문하기 전후나 인도 중에 또는 반환 시점에 기업이 재고위험을 부담한다.
- (3) 기업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격결정 권한을 갖는다.
- (4)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에 대하여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기업이 재화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기업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한 가지 특성은 거래 당 고정된 수수료 또는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의 특정 비율로 기업이 가득하는 금액이 미리 결정된다는 것이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9.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 (1)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

죽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1. (다)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2)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2. (가)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3. (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2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3) 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 (8)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34.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동일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와 그 정부의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평가함에 있어 보고기업은 그러한 기업들간의 경제통합의 정도를 고려한다.

#### ☐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 회계감사기준 240. 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8.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을 때,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오류의 발견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 감사절차가 부정의 발견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이 감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감사인이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그러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 27. 감사인은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을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기업의 통제활동 등 그러한 위험에 관련된 통제를 이해하여야 한다.
- 28.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에 대하여,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전반적인 대응을 결정하여야 한다.
- 47. 감사인은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해당 감사업무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린 경우,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감사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 회계감사기준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 6.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평가된 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후속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7. 감사인은 수행될 후속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b)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 A19. 감사인이 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때는, 감사증거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는 제3자로부터 입수하는 증거에 보다 중점을 두거나 다수의 독립적인 원천으로부터 보강증거를 입수함으로써 보다 관련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
- 8.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a) 감사인이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평가할 때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 (즉, 감사인이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 (b)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 회계감사기준 500. 감사증거

- 4.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

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A2.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에는 질문 외에 조사, 관찰, 확인요청, 재계산, 재수행 및 분석적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결합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A18. 외부확인(확인당사자)은 문서나 전자 형태 또는 기타 형태의 매체에 의해, 제3자(확인당사자)가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함으로써 감사인에게 입수되는 감사증거를 나타낸다. 외부확인절차는 일반적으로 특정 계정잔액 및 그 구성요소와 관련된 경영진주장을 다룰 때 유용하다. 그러나 외부확인이 계정잔액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어떤 기업이 제3자와 맺은 계약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동 확인요청은 계약에 어떤 수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정이 있다면 관련 세부사항은 무엇인지 묻기 위해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확인절차는 예를 들어 수익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면계약”이 없다는 것과 같이, 특정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하 생략)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도움으로 작성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유의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공정성을 평가함.
  - (b)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함.
  - (c)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함.
9.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명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

## □ 회계감사기준 510. 초도감사-기초잔액

6.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 - A2 참조)
  - (a) 전기의 마감잔액이 정확하게 당기로 이월되었는지, 또는 해당되는 경우 재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
  - (b) 기초잔액에 적합한 회계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결정함
  - (c)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함. (문단 A3 - A7 참조)
    - (i) 전기재무제표가 감사를 받은 경우,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전임감사인의 감사조서를 검토함
    - (ii) 당기에 수행된 감사절차가 기초잔액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함
    - (iii) 기초잔액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특정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7.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당기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감사인이 당기재무제표에 이와 같은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450 3에 따라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해당 왜곡표시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한다.
8.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반영된 회계정책이 당기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 표시 및 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 회계감사기준 700.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7. 이 감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 적정의견 -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 표명되는 의견

### <감사의견>

35. 감사인은 공정표시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 법규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의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a) 재무제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b) 재무제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심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720